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행복 금융 실천하는~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철강재 도·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헌법재판소 방향 도로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尹 탄핵 심판 선고 운명의 날… 국정 복귀냐 조기 대선이냐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인용시 6월3일 대선 유력… 여야 대선 체제 전환
기각·각하시 직무 복귀… 담화·개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등 향후 정국 향방도 갈리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마무리 되든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반대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尹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

여야 정치권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3일께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을 인용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권한이 박탈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약 60일간 더 지속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희망했던 지지자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탄(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등 탄핵 정국동안 대야 장외 투쟁 행보를 보였던 강경파를 필두로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안이 부재하다는 현실론으로 인해 이내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안정론을 재차 이어가는 동시에 후보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같은 해 3월10일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3주 만인 같은 달 31일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대선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선거 관리, 경선 일정 등을 관리하게 된다.

당내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선 룰이나 선출 과정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약 3주가 소요됐다.

◇기각·각하되면 尹 즉시 직무 복귀… '개헌' 등 정국 요동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동시에 대국민 담화 등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트럼프발(發) 관세 등 통상리스크와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한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면에 계속〉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민사회·유림단체, 파면 촉구

광주비상행동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해야"
광주향교 유림들 "국민 외면 말고 정의로운 판결하길"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광주 시민사회와 유림단체가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전원일치 탄핵을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상계엄 이후 12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내란 세력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내란수괴 복귀를 도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헌재는 극도의 사회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마지막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전원일치 파면 인용 판결은 찢겨진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대로 8대 0 전원일치 탄핵을 인용하라"고 강조했다.

광주향교 5개 유림단체도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8인의 재판관 모두 파면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 끝까지 최선"

77주년 추모사… 진상 규명 등 위한 특별법 개정 동참 다짐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제주 4·3사건 77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에 희생된 영령을 깊이 애도하고,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제주 4·3 77주년, 그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추모사를 통해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다. 평화로운 섬 제주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폭력의 화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며 "희생된 3만 여 영령들의 넋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깊이 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제주4·3 특별법 제정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노력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는 유사한 아픔을 간직한 지역으로 제주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두 지역의 역사적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상호교류의 장을 넓히고,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선호 기자